

'전북 상용차 위기 해법 기아차 인수 과정 선례서'

두세훈 도의원 "1998년 당시 부채 7조원 탕감받는 조건으로 인수한 후 기아차 법정관리에서 졸업 정치권·재계 노력, 차 팔아주기 운동으로 가능해"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안주 2)은 지난 27일 제378회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북상용차 위기 극복을 위해 전북도가 정치권, 재계, 시민사회와 함께 중앙정부에 대폭적인 R&D 재정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은 "지난 5년 사이 전북 상용차 도내 생산이 40% 수출은 50%



이상 급감했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생산량은 40% 수출은 53% 이대로 추락했으며, 타타대우상용차는 생산과 수출 모두 58% 이상 급감했다"고 밝혔다.

실제, 경제위기와 코로나19가 겹치면서 타타대우자동차는 이미 150명이 구조조정 됐고, 지난 27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는 상용차 생산 가동률이 40% 미만으로 감소해 조합원 130명이 직장에서 떠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두 의원은 "1998년 당시 기아차 당시 회장이 불가능해 보였으나, 현대차가 기아차 부채 약 7조원을 탕감받는 조

건으로 기아차를 인수한 후 22개월 만에 기아차가 법정관리에서 졸업했다"면서 "전북도가 기아차 선례를 연구해 전북상용차산업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8년 당시 현대자동차의 기아차 인수 관련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현대의 기아 인수를 거부할 경우 채권단의 더 큰 손실을 우려해 담보권자의 5분의 4, 무담보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대가 제시한 약 7조원 부채탕감 회사정리계획안을 의결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두세훈 의원은 "M&A 교과서라 불리는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는 정치권 및 재계의 노력과 시민사회의 기아차 팔아주기 운동으로 가능했다"면서 "이에 전북도도 정치권, 재계, 시민사회와 함께 전북상용차 팔아주기 운동 전개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대폭적인 R&D 재정지원을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복지여성보전국 새해 주요 업무계획

전북형 복지안전망 구축

포용복지 내실화 · 아동청소년 성장 지원 등 5대 목표 제시 코로나19 효과적 대응 위해 백신 접종 대응체계 구축 나서

전북도 복지여성보전국은 올해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5대 정책목표와 6대 추진전략 및 24개 실행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5대 목표로 ▲저소득 생활안전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포용복지 내실화 ▲양육·돌봄 환경 공적책임 강화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활력있는 노후보장 및 장애인 자립지원 ▲필수 의료 지역격차 해소 및 감염병 위기대응 고도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도민 평생 건강 증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전북도의 2021년 복지보전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946억원이 증가(2020년 2조8,996억원 대비 6.7% ↑)한 3조942억원이다.

도 전체 예산 8조138억원의 35.6% 비중을 차지해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예년에 비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백신 접종 대응 체계 구축 및 방역 인프라 확대로, 안전하고 정당한 전북 만들기에 온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계획수

립 및 추진단을 구성하고, 접종센터 및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며,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 확대(21→88개소),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속 운영(15개소), 음압병상 확충(13→72병상) 등 시설·장비를 확충해 감염병 대응과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전국장은 "안전되고 평안해야 일대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영정지원(寧靜致遠)'의 의미대로, 도민이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8일 부안군에서 월례회를 갖고 최근의 코로나 사태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손실보상 법제화를 담은 '지역일자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통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가 코로나로 고수 받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와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8일 부안군에서 월례회를 갖고 최근의 코로나 사태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원 방안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며 '조세 특례법'을 개정,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정당한 손실보상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협의회는 또 변산반도 국립공

원 구역이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를 해치고 있다며 현실적인 구역 재조정을 요청하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조정 결의안'을 채택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현재, 법률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에 묶여 각종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원 총량제 폐지와 각종 인허가 폐지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 활성화에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부안군 전체면적의 31.2%가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고 그동안 자체타당성 조사를 통해 310만㎡에 대한 공원구역 해제와 공원면적 총량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정구역 면적대비 전국 최고 수준의 공원구역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강동화 협의회장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코로나 피해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상 기자

민주 김수홍 의원, 정책 협조 기업 투자유치 연일 '강행군'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 갑)이 28일 경남도를 방문해 '메가시티'와 '제2천사' 설치 관련 정책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지역 대표기업들을 찾아가 투자유치 활동도 병행하는 등 연일 강행군을 이어갔다.

김수홍 의원은 이날 바쁜 일정을 마친 뒤 다음날인 29일에도 진주시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연이어 방문해 도시개발 관련 사업 추진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환대를 받은 김 의원은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합해 초광역도시로 만드는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한 '전북 메가시티'에 대한 적절한 구상 및 실행요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15년 진주시에 설치된 경남도청 서부청사의 설치 과정과 광역자치행정의 분리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에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전북 북부청사 익산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오후에는 창원시 소재 대기업인 두산중공업과 중경기업인 태림산업을 방문해 기업유치 활동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경영인들을 만나 코로나 상황에서의 애로사항 및 투자 의향을 살폈다.

창원시에서의 기업 방문을 마친 김 의원은 진주시로 이동해 경남 서부청사를 방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분리 설치된 경남 서부청사의 지역사회 역할을 비롯해 분리 설치된 광역자치단체가 도내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살폈다. /유호상 기자

조동용 도의원 "도정 기본방향, 시대변화·정부정책에 맞게"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 3)이 지난 27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실국별 2021년도 업무계획 검토결과 매년 비전, 목표, 전략이 동일하다"며 "시대변화와 정부정책방향을 반영하지 못한 도정 기본방향으로는 지방자치시대 전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각 실국별로 도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전북 구현(도민안전실), 생활속 문

화와 살아있는 역사로 피어나는 여행 체험 1번지(문화체육관광국), 지역 공공인프라 확충으로 전북 대도약 기틀 마련(건설교통국),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대외협력 구현(대외협력국) 등 올해의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전략과 추진과제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는 작년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다.

특히, 복지여성국의 경우 2020년 비전을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로 정하고 6개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는데, 2021년 업무계획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년도와 똑같은 비전과 추진전략을 붙여넣기 수준으로 재탕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상임위, 올 상반기 업무보고

"마을별·마을내 갈등 해결 대책 수립을"

농산경위, 도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서 농촌 체험마을을 관련 지역 농업 변화 모니터링 농가소득 향상 정책 추진 주문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28일 임시회 기간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2021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중점과제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김철수 위원장(정읍)은 "농촌 체험마을과 관련된 사업 추진에 있어 지원의 차이로 인해 마을별 또는 마을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주영은 의원은(전주9)은 전북도 농민의 농가소득이 전국 평균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개별 농가소득은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삼각농정 관련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북도 농업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개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송성환 의원(전주7)은 "농축산식품과 관련된 도내기업들이 대형마

트 등 대기업의 갑질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갑질피해를 당한 기업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호윤 의원(전주1)은 "동물위생시험소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정원에 비해 현원이 많이 부족하다"며 "도내 축산농가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이므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충원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훈열 의원(부안)은 "삼각농정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와 합의된 사항에 대해 위원 개개인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위원회의 운영이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위원회의 기능, 역할을 보완해 위원회의 위상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거시기장터가 운영시스템 개편 및 11번가,

농협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향우회를 활용하는 등 여러가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코로나 정국 속에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지자체 참여가 저조하고 판매량이 늘지 않는 등 거시기장터에 대한 운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홍보와 판매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산지 닭값과 계란값이 상승하고 있어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입 계란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등 조치를 취해지고 있다"면서 "농민의 피해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한기 의원(진안)은 "채소류 생산인정제 지원사업이 도내 6개 시, 군을 대상으로 면적조정, 출하중지 및 출하장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조사 실시를 통해 누락돼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초등학교 학생의 학습·안전 위한 적극 행정을"

교육위, 시·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촉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전주6)는 28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유·초등학교 학생의 학습 및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김종식(군산2) 의원은 "도내에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아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아동학대를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강용구(남원2) 의원은 "돌봄교실처럼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곳에 전기장판, 난방기구, 전기 팬벨 등이 있는지 조사하고, 안전한 난방기구 설치와 교육 건물의 에너지 지평화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영일(순창)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 때 시정조치를 요구했던 사안들이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장에 반영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특히,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학교급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김정수(익산2) 의원은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교육기관 중 하나"라며 "이곳에서의 문화가 곧 그 지역의 문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긍정적 언어사용을 당부드린다"며 "이 문화가 학교로도 전달되어 학생들이 어린 시절의 따뜻한 한마디로 큰 원동력을 갖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지(비례대표) 의원은 "에코시티의 중학교 이전 사안이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전주교육지원청의 품평한 준비"를 당부했다.

최영삼(비례대표) 의원은 익산교육지원청의 전국에서 처음으로 준비 중인 온라인돌봄 사업에 대해 "익산의 110개 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경제 활성화는 물론 물품구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편의성과 효율적 행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명실한 준비로 성공적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수(전주6) 위원장은 "익산교육지원청이 전국 최초로 준비 중인 교육기관 온라인 소용 플랫폼은 지역 상공을 한데 모아 학교와 익산지역 사업자 간 견제 사업이다"고 말했다. 그는 "익산지역의 온라인 플랫폼에 기대가 크다"며 "기대만큼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필요한 만큼 첫술에 배부르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해 타 시·도가 참고하는 우수사례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학부모 기자단과 활발한 소통이 곧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면서 "차라리 연 3회 미만으로 소통한 지원청들이 올 해는 소통하는 시간이 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전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 전북도교육청 교육감 물품구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편의성과 효율적 행정을 가능하게 할

등을 채택했다. /유호상 기자